도, 낙농산업 발전 박차

안전한 우유생산 727억 투입
깨끗한 축상농장 지정 확대
착유펌프, 진공펌프로 교체
우유 소비기반 확대 위해
학교우규급식 지원 등도

전북도는 한-EU,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침체된 낙농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올해 깨끗한 농장조성과 안전한 우유생산에 727억원을 투입해 낙농산업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고 8일 밝혔다.

FTA 발효 이후 젖소농가 감소, 유제품 수입량 증가로 우유의 국내 총생산액 감소로 인해 낙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됐다.

젖소사육농가는 2017년 4분기 기준 461농가로 3만3,000두로 2014년 대비 약 10% 감소, 2016년에 유제품 수입량은 2014년 대비 약 4만2,000톤이 증가한 26만1,000톤이며 국내 총생산액은 2만1,750억원으로 1,650억원이 감소됐다.

그 결과 전북도 원유생산량은 156천톤으로 2014년 대비 7,000톤 감소, 생산액은 1,639억원으로 84억원이 감소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18년 낙농산업 5개 분야(시설, 운영, 소비기반조성, 조사료, 질병예방)에 727억원을 투입하여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소비 활성화를 이룰 계획이다.

이에 따라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늘리고 농장에서 발생되는 착유 세정수를 깨끗한 물로 정화할 수 있는 시설에 9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기존 오일(oil)방식의 착유펌프를 진공(공기)펌프로 교체, 젖소의 유방염 예방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9억원을 지원해 더욱 안전한 우유를 생산토록 할 계획이다.

도는 우유 음용습관을 조기에 형성시켜 우유 소비기반 확대를 위한 학교우유급식(52억원)지원과 조사료 생산기반(644억원), 질병예방 및 농장운영(13억원) 등 낙농산업 전반에 지원한다.

반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낙농육우협회 전북도지회에서는 전북도내 아동복지시설 3개소에 연간 5만5,000팩(4,600만원정도)을 지원하는 사랑의 우유 나눔을 통해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사랑의 우유 나눔 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FTA 발효로 낙농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친환경적 축산여건 조성,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전북도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해 깨끗하고 안전한 우리 우유를 많이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동애등에 선도기업 방문 이규성 농촌진흥청 차장이 8일 김제시 백산면에 있는 산업곤충 생산 산업체인 CIEFF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동애등에는 파리목에 속하는 곤충으로 유기성 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 등을 먹으며 동애등에의 배설물은 퇴비로 사용된다. 또한 유충은 반려동물 사료로 사용된다.〈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인구감소 극복… 전북도, 인구정책 추진 협력회의

전북도는 8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도 인구정책 관련부서와 14개 시군 인구 담당부서, 전북연구원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는 전라북도 인구정책 추진현황과 핵심과제 전문가 자문 등 향후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군에서는 지역 인구동향 및 시군정 방향, 인구감소 극복을 위한 우수 및 핵심사업 등을 공유하고 지역 인구를 늘리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특히, 군산은 군산청년희망 스퀘어 건립사업(2018년~2021년, 26억), 진안은 청년몰 조성사업(2018년~2019년, 18억), 순창은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2018년, 12억원) 등 추진하여 인구 늘리기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진행 중인 중앙공모사업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방향 및 준비상황 등을 공유하고 전북연구원과의 자유로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인구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도는 정기적인 시군 협력회의를 열어 시군과 함께 인구 늘리기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으며, 지역의 우수사례 등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진성 기자

6·13 지방선거 전북도교육감 예비후보 동향

김승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만들 것"

김승환 예비후보가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확실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승환 예비후보는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4년 학생안전관리지원단을 구성·운영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는 '전북안전 매뉴얼'앱을 개발해 보급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라돈, 석면, 우레탄 등 각종 유해물질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방안들을 적극 추진한다.

우선 김승환 예비후보는 유·초·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 렌탈 보급(40억원)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또한 선박 슬라이드 탈출과 선박 뛰어내리기 탈출·사다리 밧줄 탈출·구명 뗏목 탈출·침수자 구조 교육 등이 가능한 '해상안전체험관 건립'과 생존수영을 위한 '수영장 개설 및 신설'도 주요공약 중 하나다. /기동취재반

유광찬 "특별교부금 확보, 교육감의 의무"

유광찬 전북교육감 예비후보는 "교육감의 불통과 독선으로 인해 전북교육청은 인근 시도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특교금만을 확보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갔다"고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판했다.

유 예비후보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웃의 전남교육청보다는 1,153억원, 충북교육청보다는 669억원, 그리고 충남교육청보다는 무려 1,365억원이 적은 3,032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것은 교육감의 의무이기 때문에, 교육감에 당선되면 발로 뛰는 행정과 학생을 중심에 두는 교육논리로, 최대한 많은 교육재정을 확보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기동취재반

쭈꾸미 금어기 시행… 11일부터 8월 말까지

도 "낚시 포함 어업행위 금지"

전북도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5월 11일~8월 31일)'가 신설됨에 따라, 주꾸미 금어기에는 낚시를 포함한 일체의 어업행위를 할 수 없다고 8일 밝혔다.

주꾸미는 수심 10m 이내의 얕은 연안에 서식하며 봄철에 약 200~300개의 알을 낳는데, 산란 직전의 알밴 주꾸미와 부화된 어린 주꾸미 어획이 성행하면서 1990년대 대비 1/4 가량으로 어획량이 크게 감소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산란 직전의 어미와 충분히 자라지 않은 어린 주꾸미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주꾸미 금어기 신설을 추진해 지난달 3일 국무회를 통과(시행 4월 10일)했다.

따라서 올해 처음으로 11일부터 8월 31일 사이에 주꾸미를 잡는 행위가 완전 금지되어,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전북도에서는 감소하고 있는 주꾸미 자원회복을 위해 부안군 연안 해역에 주꾸미 산란·서식장 조성 시범사업(2018~2022 / 2억5,000만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주꾸미 치어를 생산하여 도내 연안에 방류*하여 고갈된 주꾸미 자원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 김대근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금어기 신설로 주꾸미 자원회복으로 어업인 등의 소득이 증대되길 바라며, 도내 연안의 수산자원 증강을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며, "실질적인 수산자원 회복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여가부 "성희롱 실태조사 50인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할 것"

여성가족부(여가부)는 '2018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종전 상시종사자 50인 이상 공공·민간기관 대상에서 30인 이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여가부는 8일 올해 성희롱 실태조사의 대상기관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가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수립·이행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매 3년 주기로 실시된다. 성희롱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지난 2015년부터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해 실시됐다.

올해 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수행한다. 상시종사자 30인 이상의 공공·민간기관 1600개소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업무담당자 1600명·일반직원 9200명)으로 진행된다.

조사참여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조사와 방문면접조사가 병행된다.

조사 내용은 ▲성희롱 피해경험과 2차 피해 실태·현황 ▲성희롱 피해경험시 보호조치·대응노력 ▲성희롱 사건처리 시스템 운영 현황 ▲성희롱 성희롱에 대한 인식 등 조직문화다.

여가부는 9월까지 표본설계, 예비조사, 본조사를 실시하고 11월 조사결과 분석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와 협조 체계를 구축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직장내에서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전반이 성평등적 인식을 공유하고 왜곡된 성별고정관념과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바꿔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성희롱 실태조사에 민간사업장들도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강대훈(1943. 1. 26.생 2018. 1. 29. 사망)의 재산상속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강동극 판사의 심판으로 법원에 수리되어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 또는 수증자는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인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일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18느단519 상속한정승인
판사 강동극
▶피상속인: 망 강대훈(1943. 1. 26.생
2018. 1. 19. 사망)
최후주소: 전북 부안군 위도면 진리안길 13-7
▶공고인: 김명자
▶상속한정승인수리일: 2018. 4. 17.
▶공고기간: 2018. 5. 9. ~ 2018. 7. 8.
▶주소: (청구대리인 김준영의 송달장소)
전주시 덕진구 들사평1길 9
(덕진동 1가, 스카이블루빌)
101호 한울법무사사무소
010-8645-7332